

일본경제의 불황 요인에 관한 고찰

최 원 철*

목 차

- | | |
|---------------|-------------------------|
| I. 서론 | IV. 설비투자의 동향 |
| II. 일본경제의 현황 | V. 변화가 요구되는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 |
| III. 공공투자의 과제 | VI. 결론 |

1. 서론

일본경제는 버블붕괴 이후에 거의 10년동안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였는데 '99년에 들어와서는 침체에서 약간씩 벗어나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경기동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광공업 분야의 생산지수를 보더라도 '99년 4월부터 6월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판단이지 기업 및 민간이 피부에 와 닿는 경기감각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경기를 주도해야 하는 설비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내수부진 상태도 여전히 가운데 고용사정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면 경기가 지속적이면서도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것보다는 추가적인 재정투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짝하는 호조를 보이다가 예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견들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원적으로 경제체질이 강화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대단히 미흡하고 또한 체질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이라든가 합리화를 위한 추진력이 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구조개혁 여부에 따라서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특히,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자산가격이 하락되면서 그것과 더불어서 오랜기간 동안 누적되어 온 은행부실채권 처리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개혁에 따른 변화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경기침체를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본고에서는 일본 경제의 침체원인을 규명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I. 일본경제의 현황

전후에 일본경제가 심각한 불황을 경험하게 된 것은 최근에 경기침체를 포함해서 10회에 이르게 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과 같이 심도있는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된 것은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의 불황(1973~11, 1975~3월)이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다. 이번에도 현시점에서는 '80년 2월~'83년 2월까지 지속되게 된 제2차 석유위기 이후에 버블경제가 붕괴된 직후와는 상당히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상황으로 내다본다면 제1차 석유위기 직후의 경제적 어려움과 비유될만한 상태이다. 불과 1년전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경기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리라고는 진단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인 여론의 경우에도 소비세율이 인상되고 건축재정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소비의 침체라든가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설비투자라든가 수출증가에 힘입어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경기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이렇듯 경기예측이 크게 빗나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이 경기진단을 잘못하게 된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겠다. 우선 소비자들의 소비행위가 예상 이상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소비억제 경향이 나타났고, 그것이 개인소비라든가 주택건설을 폭넓게 침체시켰던 면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소비세율 인상에 불만적인 요소로 나타나게 된 행동들이 소비수준을 극도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1998년 경제백서에서는 개인소비에 지출되어지는 규모를 2조엔 규모로(GDP 약 0.4%)추산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연동되어서 '96년도 성장률이 0.4%로 상승됨과 동시에, '97년도에 있어서는 성장률이 0.4%로 하락됨으로 인하여, '96년부터 '97년도에 걸쳐서 성장률의 차이가 0.8%나 발생된 것으로 사려된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나 '90년대에 들어가는 저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함으로써 예상 이상으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수치라든가 기업경영인과 소비자들이 경기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실감적으로 느끼게 된 배경에는 '97년 11월 이후가 되겠다. 따라서 심각한 경기하락을 증폭시키게 되었던 원인으로서는, 경기의 외적인데에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시아 경제의 경기침체의 영향이 일본경제에 급속하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된 시기를 보면 '97년 7월 이후였는데, 그것이 다른나라들로 폭넓게 확대되어가면서 아시아 지역국가들이 경기의 감속을 초래하게 되었고, 더욱이 일본의 총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대아시아 수출도 감소하게 되었는데, 수출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 배경을 보면 '97년 11월 이후가 되겠다.

대아시아 수출물량을 보면 같은 달에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전환된 이후에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어, '98년 9월에는 전년대비 14.7%나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것과 더불어서 수출총량의 신장률도 감소되어서 '98년 5월 이후에는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전락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하여 종전에는 아시아 제국에서 수요확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자본재라든가, 소비재와 같은 상품들의 수출비율을 높여나가고 있었다는데 이제는 이 지역으로의 수출부진상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 경제의 감속의 영향은 가격면

에서도 미치고 있는데, 말하자면 세계 제1차 상품의 거대한 수요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아시아 제국들로서는, 이 지역의 경기후퇴는 국제상품 시장의 경기하락을 초래하고, 그것이 국내제품 가격에도 파급되어서 기업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97년 11월에 발생한 대규모 금융기관의 파산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들의 불안심리 작용이 국내경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규모적인 금융기관의 붕괴는 그 자체가 신용의 보루였고 국민들의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금융기관이었던 만큼, 이것이 부분적으로나마 붕괴됨으로써 초래되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생산을 줄이게 하고, 소비수준을 급격하게 위축시키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금융시장이라든가 기업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불안심리가 더욱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경기악화가 증폭됨으로 인해서, 고용과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기침체가 가열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경제에 있어서는 고용과 소득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두가지의 감소와 더불어서 소비세율이 인상되고 고지가, 저금리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부진해지고, 주택수요도 계속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비수준이 낮은 상태와 주택건설의 부진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설비투자의 급속한 축소를 초래하게 된다.

경기불황이 생산이라든가 고용·소득 감소를 야기시키게 되고 그것이 개인소비와 주택건설, 더 나아가서는 설비투자의 축소로 연결되어서 경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는데, 이로 인하여 경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시점에 와서는 전체적인 자산가치의 하락이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경기악화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의한 이익이 자산가격 하락에 의한 디플레이 압력을 경감시켜왔다. 또한 자산가격의 하락으로 말미암아서 마이너스 영향을 받게 된 기업의 수익체질과 재무체질의 악화는 은행자금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완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은행으로서의 더 이상 큰 위험을 감수 할만한 체력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겠고 또한 보유주식의 평가하락은 기업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자산가치의 하락이 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어 실제적인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는 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경제란 것은 경제기술적인(이론적인) 측면만 다루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급도 인간이 하고 수요도 인간이 하고 기술개발도 인간이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그나라의 경제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이론적인 인자만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려고 제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경기는 침체되기 마련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에도 경기침체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은 소비심리가 꺾어붙었다는 점이다.

내수부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인간을 그때 그때에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문화 경제학의 측면을 더욱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된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시대에 따라서는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금번에 경기침체 과정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시장관계라든가, 경제학자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때로는 실제와는 거리가 먼 비관론을 제시한다든가 강경론

을 제시해서 경영이라든가 정책을 흔들리게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기감속과 아울러서 시장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승자와 패자의 구분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97년도 후반에 있어서도 그것을 경제의 새로운 발전단계로서 한번 거쳐가야 하는 이행과정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좋은 경험으로 생각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밀거름이 되어서 미래의 발전을 더욱 고취시키고 촉진시킬 수 있는 신진대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게 되면, 서로가 지나친 과잉반응을 하면서 단지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고만 하는 단순론을 너무나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경영자는 물론이고 정부, 국민들까지도 필요 이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면서 개인 소비를 줄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기업, 산업,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게 되는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경영환경의 구축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수익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부채잔고에 대한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중한 행동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은 기업에 대한 채무와 관련한 움직임은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라든가 해고 움직임에 의해서 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과잉설비, 과잉고용, 과잉채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계속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기업의 체질을 강화시키고 치열한 국제경쟁력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사려된다. 이러한 구조조정을 사업의 재구축과 더불어서 진전시킴으로 인하여 수익률과 경쟁력이 제고되고, 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기업으로서의 존속,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일본경제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원천으로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Ⅲ. 공공투자의 과제

2000년도의 일본경제는 민간부문의 폭넓은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에 있어서 과잉공급의 경제구조를 반드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중·장기적으로 일본경제를 고찰해 보면 이러한 구조조정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잉공급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조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경제가 정체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구조조정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경기불황에 빠질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기적인 경기불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기를 어느정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들 수 있겠다. 다만 현재의 일본경제의 추세로 본다면 금융정책으로 경제상황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더군다나 초저금리 상태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미연에 예방하고 경기부양을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정책을 들 수 있겠다. 일본정부로서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보니, 경기부양 정책의 일환으로서 수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몇차례나 경기부양을 시도해 봤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순조롭게 나타나고 있지 못하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방대하게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지만 인위적인 정책의 효과가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데 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란 것은 인위적인 정책의 효과도 때로는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보다는 가능한 한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생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1998년에 일본정부는 종합경제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사업에 1조 5천억엔을 포함해서 총액 7조 7천억엔의 공공투자의 실시가 포함되고 있었다. 이와같은 공공투자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건설이 확대되면서 실업자도 구제되고 실제적으로 투자효과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더욱이 현정권 하에서는 8조엔 이상의 재정지출을 통하여 경기를 자극하여 왔고, 따라서 이러한 공공투자로 말미암아서 근원적으로 불황이 극복이 되어가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그러나 서서히나마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경기대책에 의해서 '98년 '99년도의 재정은 '97년도에 긴축형 재정으로부터 전환되어서 경기자극형 성격으로 180도 회전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만큼 대규모적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근원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리라고 보는 경향은 미미하다는 흐름이다. 그 가운데서도 경기대책에 의한 공공투자의 지속적이고 추가적인 투자는 도로사업이라든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업이 많았고, 따라서 경기자극 효과도 대단히 미미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추가공공투자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기조로 선회할 것이라는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가 경기회복의 기대를 크게 걸고 막대한 공공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효과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그것은 일본이 거품경제가 꺼진 이후에 너무나도 뼈저린 경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8조엔이란 거액을 투자해서 경기를 진작시켜 보려고 최선을 경주해 왔지만 기대치에 거의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 상태에 빠진 초기부터 대규모적인 과잉설비 조짐이 진전되는 가운데 그러한 것이 경기를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효과는 약간씩 나타나고 있었지만, 경기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보면 공공투자로 인해서 경기부양효과를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공공투자라는 것은 경제를 구성하는 수요항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공투자는 이러한 투자가 전혀 없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약간씩의 경제성장률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1992년 8월에 종합경제 대책의 일환으로서 대규모적인 공공투자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92년부터 '99년에 걸쳐서 성장률은 미미하지만 각각 1.1%와 1.0%로 끌어올리고 민간수요 부문의 저하를 어느정도 만회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공공투자를 추가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설재의 경우에도 재고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약간의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것이 공공투자라고 볼 수 있겠다.

말하자면 경기변동과 경기순환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추가적인 공공투자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경기부양을 꾀하여 보려고 몇번이고 시도해 왔지만, 기대와는 훨씬 못미치는 아주 저조한 단계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추가적인 공공투자에 의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하여 이것이 큰 계기가 되어 민간수요를 진작시키고, 수출을 증대시키고, 설비투자를 확대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서 경기를 본격적으로 부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1) 소비성향의 변화

일본은 90년 초기부터 거품경제가 꺼지면서 개인 소비수준이 계속 하락되어 왔다. 특히 97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체가 현저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개개인의 가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득수준이 떨어져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이 장래에 불안한 상황전개를 직시해서 돈이 저축이 되어 있어도 쓰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부진이 지속되어온 배경에는 국민들이 소비구조도 변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총무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반 셀러리맨들이 실질적으로 소비지출의 현황을 보면 '80년대에는 매년 1% 이상으로 소비수준이 상승되어 간데에 반하여,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로는 ('91~'98년)에는 매년 0.5%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면을 볼 수 있겠다. 특히 '97년도에는 전년과 비교하면 2.3%나 하락되어서 최대의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지속적으로 '98년도에도 하락으로 이어져서 전년대비 1.1%로 이어지게 되었다.

대형 소매점 판매액이라든가 판매 통계를 보더라도 버블붕괴 이후에 매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특히 97년에 들어가서 그 축소폭이 확대되어 갔던 면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버블붕괴 이후에는 수요 부진 상태가 지속되게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소비수준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된 배경에는 소득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을 들 수 있겠다.

'97년도에 들어와서도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감소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수요추세의 동향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90년초기부터 내려가는 상황에서 '97년도에는 더욱 심화된 면을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배경에는 '97년도 11월부터 시작된 대형 금융기관들이 경영 파탄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사원 정리해고로 이어지고, 소득수준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했던 것이다. 따라서 소비심리마저도 크게 위축되면서 소비가 꾀꾀 얼어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인들의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장래를 설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국민성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에 장래가 불안정하고, 말하자면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서 구매의욕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구매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는 또한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는 제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데도 약간의 원인이 있다고는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돈이 저축이 되어 있더라도 장래를 대비하는 차원에

서 또한 소득수준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소비의 폭을 대폭적으로 줄여 갔던 것이다. 따라서 미래에도 일본 경제를 전망할 때에 어떠한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장래에도 경기가 급격하게 좋아지리라는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내에 소비가 되살아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IV. 설비투자의 동향

다음으로 경기침체의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설비투자의 부진을 들 수 있겠다. '97년 이후에 설비투자의 동향을 업종별로 고찰하여 보면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이 부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들이 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태에 빠져있는 면을 볼 수 있겠다.

'98년도에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 '97년과 비교를 해보면 32.1%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16.7%나 설비투자가 축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대기업을 비롯하여 특히 중소기업에서 설비투자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겠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요인을 들 수 있겠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내수부진 상태에 깊숙히 빠져 있다는 점이다.

경제라는 것은 수출 일변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수출도 내수의 뒷받침이 있을 때에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일본 경제의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은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하나는 국내소비의 침체이고 두 번째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들 수 있겠고, 세 번째는 정치의 리더십의 부재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국내 내수부진 상태에 빠지게 되면 기업들이 이윤의 극대화를 이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하자면 기업의 이윤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의 수익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방면으로 파급되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가뜰이나 일본기업들의 경우에는 과잉시설과 과잉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과잉설비와 과잉인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과잉시설을 가동시켜서 생산을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속 재고가 쌓이게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내수부진에 빠져 있는 한 과잉설비와 과잉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내유보자금도 감소하게 되어서 설비투자의 어려움을 더욱 부채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97년이후부터 수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었고 이것이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크게 축소시켜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던 것이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이와 같이 내수의 부진은 기업들이 수익률이 크게 저하되면서 기업들이 안고 있었던 과잉시설과 과잉인원을 정리해야 하고, 이렇게 과잉시설과 과잉인력을 구조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업자들이 양산되어간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금융경색현상이 일어나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투자는 더욱 부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V. 변화가 요구되는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규제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행정력이 강하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로 쉽게 이행되기 쉬운 나라에서는 이 규제완화 및 철폐 문제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차하면 이러한 규제 문제로 인하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이 규제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들을 보면 5고라는 것이 지난 정권부터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다시말해서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 고규제, 고지가가 있다. 이중에서도 고규제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규정지을 수 있겠다. 지금은 국제경제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경제지향적으로 되면서 국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자유자재로 외국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겨야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되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라면 기업들에게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기업할 의욕을 북돋아 주면서 규제완화 및 철폐를 과감하게 실행해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고 신바람나게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한국으로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규제란 것은 필요에 따라서 최소로 삼으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에게 자유를 신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완화 및 철폐시키고 규제를 얼마만큼 최소로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일본이 경우에도 현재 규제완화 및 철폐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체질을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을 올릴 수 있을까 하는데 총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력산업 발전의 자유화를 실시하고, 전기, 가스 분야의 규제완화도 대폭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또한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탄력적인 항공운임 할인에 관련한 사항이라든가,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대형 소매점포법 폐지 결정 등, 그리고 지금까지는 가장 전형적인 규제업종의 하나였던 금융분야에 있어서는 '98년 4월부터 외환법계정을 출발로 해서 일본판 빅뱅이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구조변화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규제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시장기능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능률을 오르게 함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한발 앞으로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면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규제 완화에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확대시키면서 여러 가지의 면에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완화 및 철폐에 따라서 다방면에 걸쳐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력이 우위를 확보하면

서 대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겠다. 여기에서 규제완화에 따른 자유경쟁이 확대되면서 양질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 매출을 신장시킬 수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여기에서 치열한 경쟁에 뒤지게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도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니깐, 규제완화 및 철폐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욱 매출을 신장시키고 이윤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과 같은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들이 경우에는 도산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시장기능을 확대시키면서 상호간에 경쟁을 제고시키면서 살아남을 수 밖에 없는 논라이기 때문에, 또한 국제경제 환경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세계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시대의 흐름에 민첩하게 잘 대응함으로써 기업행동의 변화도 확실하게 진전시키게 되고 기업의 이윤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업을 재편성하고 고용면에서도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많은 일본기업들의 경우에는 종합력이란가 또는 규모의 경제에 의한 높은 이윤을 확보하는데 전념해 왔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분야를 개척하면서 한기업이 다방면에 걸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러한 것이 경제자원이 분산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수익률도 저하되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앞으로는 계열회사들이 이윤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하에서 이미 정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리해고 면에서도 과거에는 상상을 초월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장 안전하면서도 견실한 기업으로 유명한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와 같은 기업에서도 정리해고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있다. 금융분야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도 상여금이라든가 급여를 1~3%까지 삭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종신고용제가 일본의 상징으로서 오랜기간 일본사회에 깊숙히 정착되어 있었고 과거에는 이 종신고용제로 인하여 고도 성장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제도도 경제발전을 더디게 하는 족쇄로 자리잡고 있고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대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종신고용제라는 것은 경제가 호황이 지속될 때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오랜기간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유지하기가 어려운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VI. 결 론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는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에 약 9년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그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혼미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 원인들로서는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부실채권 처리문제를 뒤로

계속 미루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개혁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으면서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일어나지 않은 면이라든가 그에 따른 실물경제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문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일반국민과 기업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미치려면 요원한 실정이다. 앞서 지적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한 면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60조엔을 투입해서 금융안정을 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와 기업·소비자들에게 확대되는 불안정한 요소들 때문에 투자활동과 소비활동이 여전히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이미 누차 지적한 바이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통신 혁명의 진전과 더불어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고,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면이라든가 행정·산업·금융면에 있어서도 전근대적인 현행 제도개혁을 좀처럼 진전시키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예를 들면 규제완화 및 철폐, 행정개혁을 과감하게 진전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각종의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나감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고, 사람·물건·돈이란 경영자원이 기존 사업으로부터 신규사업에의 가동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고용흡수력을 자랑하는 의료·건강산업의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다방면에 걸쳐서 규제에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의 신규사업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앞서 지적한 의료·건강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97년 시점에서 1,187만인으로서 고용자 전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해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위생·사회보장·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고용자수는 379만으로 미국에 비하면 크게 뒤떨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투자신탁을 비롯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도입이 늦어지고 투자 어드바이저라든가 보험중재인과 같은 영·미에서는 대단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자산운영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상과 같이 각종의 규제로 인하여 기존산업이 쇠퇴되면서도 거기에 따른 새로운 신규산업이 지속적으로 육성되지 않으면서 일본경제는 '90년대에 들어와서 활력을 잃어가면서 성장률도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벤처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황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추가적인 공공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이것과 신산업으로 연결되는 미래형 사회자본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공적인 부문을 개혁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아울러 강력한 정치의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参 考 文 献

- 野口悠紀雄「bubble 経済学」, 日本経済新聞社, 1974年.
- 吉富勝「日本経済の眞實」, 東洋経済新報社, 1998年.
- 日本興業銀調査部「1994年 日本経済は こう変わる」, 日本放送出版協會, 1994年.
- 大和総研「経済のしくみ」, 日本實業出版社, 1991年.
- 細見卓「眼を覺ませ, 日本」, 時事通信社, 1998年.
- 이소무라 다케부미「日本型 市場経済」, 日本評論社, 1995年.
- 水谷允一「21世紀の日本経済」, 中央経済史, 1994年.
- 竹居照芳「日本経済の課題を読む」, 稅務經理協會, 1996年.
- 佐貫利雄「日本経済の構造分析」, 東洋経済新報社, 1994年.
- 柳田邦 男「人間の時代への 眠差し」, 講談社, 1994年.
- 하시모토류료, 신장철 역「日本経済論」, 승실대학출판부, 1998年.
- 産業研究院, 日本研究Center「일본경제리뷰」, 1997年, 1・2・3・9호.
- 小宮隆太郎「日本経済 21世紀への課題」, 東洋経済新報社, 1998年.